

지방직 7급 (2011. 10 시행)

1. 왈도(D. Waldo)의 주장이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activ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④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사이몬(H. Simon)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답] ③ D. Waldo는 후기행태주의에 입각한 신행정론자로서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성원이나 외부인의 참여를 중시한다. 이를 위해 고전적 행정원리에 기반한 계층제를 비판하고 시민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조직설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D. Waldo는 고전적 행정원리를 제시한 행정관리론을 토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한다.

2.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답] ④ Niskanen의 예산극대화이론에 의하면 정치인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관료는 개인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인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해 순편익이 극대화 되는 점(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하지만, 관료는 개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총비용과 총편익이 교차하는 점)까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급하려 한다.

3.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답]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이슈네트워크에서 나타난다. 철의 삼각에서 주요 정책행위자들은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4. 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고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

장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로 옳은 것은?

- ① 조직의 성과 제고
- ② 조직 운영의 민주화
- ③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 ④ 조직 내부의 비공식집단의 활성화

[답] ①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능률성(성과) 제고를 위해 인간의 정서와 감정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민주적·인간적 조직관리에 역점을 주는 관리이론이다. 인간관계론은 조직 운영의 민주화를 중시하지만 이를 통해 조직의 능률성(성과)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②). 인간관계론의 인간관은 사회인관에 입각해 있으며, 인간의 경제적 동기를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다(③). 인간관계론은 조직 내부의 비공식집단의 운영방식을 강조하였으나 비공식적 집단을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④).

5. 정책참여자들 간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문제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다원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라.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이 채택되고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말하며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에 의해 주장되었다(가). 신다원주의는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가미한 이론으로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은 다원주의의 인식을 같이한다(나).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집단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다). 하위정부모형은 정책네트워크 중의 하나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연구한다(라).

6.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② 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답]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든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9.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답] ②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노동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④).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 및 확대에 재투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고, 매 5년 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p><<정리>> 사회적기업육성법</p> <p>(1) 사회적기업의 의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받은 자</p> <p>(2) 사회적기업이 인증</p> <p>① 인증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p> <p>② 인증요건</p> <p>㉠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p> <p>㉡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p> <p>㉢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구체적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일자리 제공형 :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것, 서비스 제공형 : 서비스 수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것).</p>

- 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㉕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㉖ 일정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㉗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① 국가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필요한 시책 추진
 - ②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 ③ 사회적기업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④ 연계기업(사회적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음
- (4) 사회적 기업 육성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 ①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매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② 시·도지사 : 기본계획과 연계된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 ① 경영지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② 교육훈련 지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음.
 - ③ 재정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④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
 -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⑥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⑦ 기타 : 사회적 기업의 날 지정, 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10. 조직의 이중순환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건(G. Morgan)의 홀로그래픽(holographic) 조직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다.
- ② 학습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학습효과는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 ④ 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답] ① 단일고리학습은 조직의 기본적인 가정이나 규범, 목표에는 변화 없이 기존의 규칙과 행동방식을 정교화하고 개선하는 학습으로 폐쇄체제를 전제로 기존의 운영규범이나 지식체계 하에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간다. 반면 이중순환고리적 학습은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 전략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조직 가치와 규범, 전략, 행위 방안 등을 도입해 나가는 학습으로 개방체제를 전제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나 기본가정 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다(②, ④). 따라서 단일고리학습은 학습효과가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중 순환고리적 학

습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전면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난다(③).

11.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② 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온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 ③ 우리나라 1급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④ 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답] ③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지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 ②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 ③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 ④ 파머(D. 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답] ① Farmer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하나의 특징으로 ‘해체’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패러다임 간의 대조의 영역(분화)과 연결의 영역(통합)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모두 거부하는 제3의 메타 이론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패러다임의 교차가능성을 모색한다. 따라서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분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메타이론을 주장한다.

13.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답]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는 상향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정리>> 상향적 접근이 유용한 경우와 하향적 접근이 유용한 경우

하향적 접근법이 유용한 경우	특정한 지배적인 정책이 집행현장을 좌우하는 경우
	연구자가 평균적·일반적 과정과 반응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등 이론적 발전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 경우
상향적 접근법이 유용한 경우	지배적인 정책이나 법규가 없는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이한 지역적 상황과 중앙, 지방간 역할관계에 관심을 갖는 경우
	지역 간의 다양성에 연구의 초점이 있는 경우

14. 우리나라 행정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 ③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한다.
-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답]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등은 제외)으로 한다.

15.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는?

- ①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 ② 지방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을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 ③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 ④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답] ④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인정되며, 국가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①). 총액계상예산제도는 국가차원에서만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②). 납세자 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송제도만 인정되며 국가차원의 국민소송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③).

<<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구 분	국가재정	지방재정
예산제출시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광역 : 50일 전, 기초 : 40일 전
예산의결시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광역 : 15일 전, 기초 : 10일 전
출납정리기한	12월 31일까지	2월 말까지
출납기한	2월 10일까지	3월 말까지
예산의 구성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제한 있음(보통 연 1회)	편성사유 제한 없음(보통 연 3~4회)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편성과정에서의 주민(국민)참여	규정 없음	필수적 주민참여(2011년)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주민(국민) 감시	예산성과금제 도입	예산성과금제 도입
성인지 예·결산제도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제출	실시	미실시
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조세지출예산서	실시	지방세지출예산서 실시
총액계상예산	도입	미도입
발생주의·복식부기	실시	실시
납세자소송제도	미도입	도입
예비비 반영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상임위의 예비심사	필수	생략되는 기초의회도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비상설

16.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이다.
- ② 최근 유사·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세이다.

[답] ③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에는 목적세가 없다(③).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이면서 시·군세이다(①). 우리나라 지방세목은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로 간소화되어 있다(②).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자치구세이다(④).

<<정리>> 우리나라 지방세 체제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세	도 세	시·군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1) 광역시 안에 군을 두고 있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 (2) 과거 특별시·광역시세, 시·군세였던 농업소득세는 폐지되었다(2010. 1).
- (3)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다.
- (4) 현행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한다(2010.1).
- (5)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 취득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2011.1).

17. 공무원 보수제도로써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 ②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답] ②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실적·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체제이다. 연봉제는 개인 성과중심의 임금체제이므로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 의식이나 팀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①).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직무분석은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작업이고 직무평가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인 직무성과급제는 직무평가에 근거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를 보수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④).

<<정리>> 연봉제

1. 의의
 - ① 개인의 능력·실적·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체계(실적주의·직위분류제와 융합가능성 높음)
 - ②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는 제도로 하급직보다는 고위직에 보다 적합한 제도
2. 특징
 - ①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세분화된 항목 없이 임금을 총괄적으로 결정하여 지급
 - ② 개인 실적 중시로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사기 증진 및 우수인재 확보 유리
 - ③ 수당 및 상여금의 구분이 없어 보수관리 간편
 - ④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상하간 의사소통 활발
3. 우리나라의 연봉제

	적용대상	비고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공무원	직위별로 고정급 지급
성과급적 연봉제	1~ 4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경력에 따른 기본연봉 외에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 기본연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 지급

1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 전략이나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②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어떤 요인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답] ③ 메타분석은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들을 재분석하는 평가로 총괄평가 등에서 사용된 자료의 오류 여부 등을 검증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경험적·실증적 연구에 해당하며 이론적 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 중에 하나이다. 한편 크리밍 효과는 선발(선정)효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④).

19. 베버(M.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료제의 병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p>ㄱ. 조직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 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이 어렵게 된다.</p> <p>ㄴ.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p> <p>ㄷ.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p> |
|---|

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ㄹ.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ㄱ은 관료제의 병리 중 하나인 훈련된 무능을, ㄴ은 관료제의 병리 중 하나인 권위주의적 행태를, ㄷ은 관료제의 병리 중 하나인 권력구조의 이원화를, ㄹ은 관료제의 병리 중 하나인 인간적 발전의 저해를 의미한다.

20. 행정정보화 및 정보·지식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정보재의 속성상 그 생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다. 보편적 정보서비스 정책의 준거 중에서 활용가능성이란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마. 정보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지식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② 가, 나, 라는 맞는 지문이고 다, 마는 틀린 지문이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요소 중 활용가능성(Usability)이란 신체적 장애에 의해 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중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과 관련된다(가).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은 데이터(자료)이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을 정보라 한다(마).

<<정리>> 보편적 서비스

- ① 의의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
- ② 보편적 서비스의 요소
 - ㉠ 접근성(Access) : 지리적으로 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 ㉡ 활용가능성(Usability) : 신체적 장애에 의해 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 ㉢ 훈련과 지원(Training·Support) :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
 - ㉣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 : 서비스가 개인적·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개인의 만족이나 경제적 성취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
 - ㉤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 : 빈곤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용 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